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VOL.11

2017 JANUARY

발간년월 2017년 1월(통권 제11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 (동삼동) 발행인 양창호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동향분석실 Tel 0517974343 홈페이지 www.kmi.re.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

윤성순 해양연구본부 해양정책연구실장
(ssyoon@kmi.re.kr/051-797-4711)

중국을 최근 해경국을 창설하여 여러 조직에 분산되어 있던 해양경비관련 기능을 통합한 데 이어, 경비함을 대형화·무장화하면서 군사화를 추진하고, 시진핑 주석의 신년사에서 나타나듯 해양주권 강화를 천명하고 있다. 일본 역시도 중국의 해양 진출 강화에 맞춰 총리가 직접 주도하여 해상보안청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인력과 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해양경찰청의 해체 이후 해양경비조직의 위상이 저하되고 신속한 현장대응에 한계가 있는 등 해양경비력이 주변국에 비해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중국과 일본이 1,000톤 이상의 대형 해경선 보유를 크게 늘리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며, 최근 중국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 고속단정의 전복 사건을 계기로 해양주권의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면서, 해양경찰 해체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조직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분쟁이 치열해지면서 해양주권 경쟁은 해당 국가 간의 문제를 넘어 국제사회의 중대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혼란 속에서 당사국들은 자국의 해양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양경비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주변국가와 해상경계 문제가 종결되지 않은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현안과 변화를 주목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의 해양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해양경비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최근 불확실성이 커지는 동아시아 국제정세 속에서 경쟁적으로 해양경비력을 확장하는 주변국의 움직임을 직시하고 우발적 충돌의 위험성에 대비할 수 있는 적정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경비관련 조직 재편과 장비 확충 등을 통한 해양경비 역량의 강화가 시급하다.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해양주권 경쟁 심화

■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의 해양영토분쟁은 해당 국가 간의 문제를 넘어 국제사회의 중대 이슈로 대두

- 도서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을 중심으로 해당국들의 갈등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의 국력 신장에 따라 더욱 첨예한 대립관계가 형성되고 있음
- 동중국해에서는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다오위 다오) 열도에 중국 선박들의 역내 진입이 빈번해지고, 상호 충돌의 위험이 증가되고 있음
 - '16년 중국해경선의 센카쿠 영해 진입 순찰이 총 36회 188척이었으며, '17년 1월 4일과 8일에도 2회 7척 진입
- 남중국해에서도 중국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들이 도서 영유권 문제로 치열한 신경전을 벌리면서, 최근 중재 판정¹⁾을 계기로 미국의 개입까지 더해지면서 더욱 혼란이 가중됨

■ 독도와 이어도에 대한 한 · 중 · 일 간의 갈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대립의 격화 가능성 상존

- 우리나라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영유권 분쟁지역화 하고자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하는 일본은 한 · 일 인접국간의 역사적 · 외교적 관계 개선의 저해 요인이 되기도 함
- 이어도 등 한 · 중간의 EEZ 경계획정에 대한 이견으로 독도문제에 비해 덜 심각한 수준이지만 중국의 다른 영토분쟁지역 해결과정과 해상세력의 신장 추세에 따라 격화될 가능성이 존재함

그림 1. 한 · 중 · 일 해상경계



자료 : 외교통상부

1)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선을 인정하지 않고 해양 인공섬을 근거로 해양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2016. 07. 12)

■ 영토분쟁해역에서 우발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경비조직 강화를 통한 해상주권 공고화 움직임 활발

- 국가간의 영토분쟁은 군사력의 충돌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군사조직에 비해 유연한 해양경비조직을 활용한 해양주권 강화 노력이 진행 중임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아시아권 주요 해양영토분쟁 당사국들은 최근 자국의 해양경비기능을 정비하여 해경을 조직함
- 새로운 조직의 창설 및 정비를 통해 해양관할권의 집행을 강화하고 있으며, 준군사조직화에까지 이르고 있는 등 해양경비력 강화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임

중 · 일 해양경비 역량 강화 움직임 뚜렷

■ 중국은 해경국 창설 이후 지속적으로 해양경비력을 강화하고 영유권 분쟁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태세

- 해양질서와 해양권의 수호를 위해 기존 국가해양국의 감찰총대, 농업부 어정총대,公安部 변방해경, 세관 밀수단속국을 통합하여 해경국을 '13년에 창설함
- 시진핑 국가주석은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며, 누가 어떠한 구실을 삼는다면 중국인민은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 이라고 언급('17년 신년사)하였으며, 이는 중국의 핵심이익은 결코 타협이 없으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으로 해석됨
- 경비함 승선원의 직무를 해군함정과 동일하게 부여하는 등 해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함장, 기관장, 항해병, 레이더병, 신호병 등 8개로 구분하여 훈련을 실시
- 최근 대형 해경선 건조 및 퇴역 해군함정의 개조를 통해 해경국의 장비를 대형화 · 현대화하고 있으며, 해경선의 무장을 강화함
 - 함포를 탑재하고 헬기 착륙장을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해경함정 2척을 현장 배치
- 해경함정의 대형화 · 무장화는 영유권 분쟁지역에서의 자국의 힘을 과시하고 자국령에서의 심리적 억지력을 발휘하고자 함

그림 2. 중국의 초대형 해경함정 제원



- 만재 배수량 : 12,000톤
- 시속 26노트
- 76m 함포, 기관포 및 소구경포 무장
- 헬기 착륙장

자료: 中 남중국해 지배위해 초대형 해경경비함 도입 박차, 아시아경제(2016.6.20.)

■ 일본은 ‘해상보안체제 관한 방침’ 을 정하고, 해상보안청의 역할을 강조하고 해상보안 역량을 더욱 강화

- '16년 12월에 총리 주재의 ‘해상안보체제 강화에 관한 관계각료회의’ 를 개최하고, 자국의 영해수호와 관련된 주변환경이 심각하다고 진단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추진 중임
- 해상보안관련 중대 사안으로 센카쿠 열도를 침입하는 중국 선박의 대형화 · 무장화, 불법 조업선박 출현 및 테러 위협 증대를 설정하고 별도의 전략적 대응체제 구축 중임
- 해상보안관련 중대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5개의 해상보안체제 강화 시책을 추진하면서 해상보안청의 장비와 인력을 보강함
 - 장비 확충을 위한 약 200억 엔의 예산 투입과 103명의 인력 증원 추진('17년도 총 정원 338명 중)
 - '16년에도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영토분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력 104명을 긴급 증원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력 증원을 추진함

표 1. 일본의 ‘해상보안체제 강화에 관한 방침’ 주요 내용과 예산

5개 주요 시책	주요 확충 자원	예산(억엔)
센카쿠영해 경비체제 강화 및 대규모사항의 동시발생에 대응 가능한 체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헬리콥터 탑재형 순시선 3척 • 대형순시선 2척 	123.3
해양감시체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형 제트기 1기 • 감시 거점 정비 • 영상전송기능 강화 • 비밀통신기능의 강화 	41
원전 등 테러대처 · 중대사안 대응체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순시선 1척 	29.7
해양조사체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선박 고기능화 2척 • 자율형해양관측장치 정비 • 대형측량선 1척 	
기반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헬리콥터 1기 • 교육훈련시설 확충 	4.7
계		198.7

자료: 일본 해상보안청 자료(平成29年度 海上保安庁関係 予算決定 概要) 참조 작성

표 2. 중 · 일 해경선(1000톤급 이상) 보유 현황 변화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
중국	82척	111척	29척(35%)
일본	82척	62척	8척(15%)
한국	32척	34척	2척(6%)

자료: 중국 중화망(<http://military.china.com/important/11132797/20170105/30143521.html>)과 한국 해양경비본부 내부자료

최근 우리의 해양경비 문제

■ 해양경찰의 해체에 따른 해양경비 기능의 약화

- 2014년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책임으로 해양경찰이 해체됨에 따라 해양경비 기능이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본부로 재편됨
 - 해경의 수사권은 경찰청으로, 해양구조 · 구난 및 해양경비 기능은 국민안전처로 분산
- 소방방재 조직과의 통합으로 재난관련 대응에는 유리하지만 해양경비 및 현장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함
- 한편,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활발한 서해에서조차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조업이 동해로까지 확장되어 해양경비 활동을 강화해야하는 해역이 확대됨
-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의 피해는 우리나라 근해 어장의 수산자원 고갈은 물론 해양주권의 침해문제로 이어지는 상황에 직면함

■ 해경 고속단정 침몰사건을 계기로 해양주권 침해에 적극적인 대응과 해양경비 기능 강화의 필요성 제기

- 2016년 10월 7일에 서해에서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의 공격으로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하였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함
- 해양주권의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면서, 사건 발생의 원인이 약화된 해양경비력 때문이므로 해체된 해양경찰의 부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러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됨

그림 1. 한 · 중 · 일 해상경계



자료 좌 : 사고지점, 연합뉴스(2016.10.8.)

우 : 중국 어선 확인충돌 사건 당시 상황, 중앙일보(2016.10.10.)

■ 적극적 해양경비력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의 해양경비본부 체제의 변화가 필요

- 해상에서의 긴급상황에서 과도한 보고체계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²⁾처럼 신속한 현장대응에 한계가 있음
- 과거와 비교하여 해경의 기능은 거의 변화가 없으나 현재 조직의 위상이 낮아져 조직원의 사기 저하, 적극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된다고 지적함
- 육상의 경우 치안과 방재를 경찰청과 국민안전처로 나누어 담당하지만 해상에서는 동일한 조직이 담당함에 따른 과중한 역할도 고려되어야 함
- 게다가 해양영토를 둘러 싸고 침예하게 대립되는 주변 정세를 고려할 때 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정비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커지고 있음

주변국의 해양경비력 변화에 관심 가져야

■ 각국의 영해와 해양주권 수호 의지는 더욱 강조되고, 경쟁적 세력 확장 추세

- 동아시아권에서의 중 · 일 간의 분쟁은 물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들과의 영토분쟁의 갈등은 최근 미국의 개입으로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됨
- 영유권 및 해상경계 획정 문제가 격화됨에 따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해양경비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분쟁 대상국과의 경쟁적 세력 확충이 진행 중임

■ 영토분쟁이 격화될수록 이를 뒷받침할 해경력의 강화 추세가 뚜렷

- 영토분쟁의 적극적 대응을 위해 국제 정세에서 주변국을 자극할 우려가 높은 군사력 증강보다는 정치적으로 덜 민감한 해경의 전력을 급속도로 증강시키는 추세가 나타남

2) "안전처 밑에 들어가 차포 다 떼었는데...바다 제대로 지키겠나", 조선일보 기사(2016.10.12.)

- 해양경비력 강화를 위해 해경과 해군의 상호보완적 합동작전 능력의 증대, 해경 전력의 규모 확대, 항공작전 수행 능력 강화 등의 해경 현대화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 중국의 해경함정 대형화 · 무장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이 자국 해상보안청 역량 정비에 즉각적으로 착수한 것처럼 주변국 간의 연쇄적 반응이 예상됨

■ 해양경비를 위한 독립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자칫 소홀할 수 있는 주변 정세 변화 파악과 대응에 더 많은 관심 필요

해양주권 수호에 적절한 해양경비력 강화 시급

■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해양경비력 균형 유지 필요

- 최근 중 · 일의 해양경비력은 증강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해양경비력은 조직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저하되고 있음이 분명함
- 한 · 중 · 일 간의 영토분쟁과 해상경계 획정의 갈등으로 인한 우발적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대응할 상시적 세력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각국의 해경 장비 대형화 · 현대화의 가속에 따른 민감한 해역에서의 해경함선 간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의 대비도 필요함
- 주변국과의 위협과 긴장을 높이는 군사력 증강보다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해양경비력 증강을 통해 주변국의 반발을 낮추면서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위력을 과시하는 전략적 변화에 대처 필요함

■ 우리나라의 여건에 적합한 새로운 해경조직의 모델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해양경비력 강화가 요구

- 중 · 일 강대국과의 해양경비 규모의 확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다면 우리의 여건에 적합한 모델의 해양경비체제를 개발하여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음
- 해양경비력 강화를 위한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대응하여, 우리의 해양경비력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강화할 수 있도록 해경의 새로운 모델 정립의 논의가 조속히 시작되어야 함
- 새로운 해경의 모델은 현장대응력을 우선으로 하는 독립된 조직이어야 하며, 임무수행에 부족하지 않을 적정 수준의 자원을 보유해야 함
- 함정을 비롯한 자원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 단순히 관할 해역의 면적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남북한의 대치, 중국 불법어선의 대량 침입, 영토 및 해상경계 문제 상존 등의 특수한 환경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